

한국경제학회 · 예금보험공사
공동 정책심포지엄

祝 辭

2018. 12. 7. [金]

* 2018. 12. 7. 15:00부터 보도 가능

본 내용은 보도의 편의를 위해 사전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발언내용은 이와 다를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용 범

1. 인사 말씀

반갑습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입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경제학회 김경수 회장님과
예금보험공사 위성백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민병두 정무위원장님,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실 각계 전문가 분들에게도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금융권역별로 분리되어 있던 예금자보호 기능을
예금보험공사로 통합하여 운영한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그간의 통합예금보험제도의 성과를 재조명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모색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 그간 통합예금보험제도의 성과

돌이켜 보건데,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등
금융시장 ‘불안’과 ‘위기’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많은 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이를 성공적으로 극복했으며,
그때마다 통합예금보험제도는
우리 금융시장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통합예금보험제도는
금융업권별로 흩어져 있던 예금자 보호기능을
예금보험공사로 일원화한 제도입니다.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를 통해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위기시 개별 업권별로 산발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통합된 대규모의 자금을 기반으로
일사불란한 비상조치가 가능함에 따라,
신속하고 과감한 위기대응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통합예금보험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그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은행, 보험, 상호금융 등
소방위적인 신용위기 상황에서
예금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회생가능성이 없는 부실금융회사를 청산하고,
회생가능성이 있는 금융회사는
출자, 출연 등을 통해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과 일자리를 지키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2008년에는
서브 프라임 모기지 부실에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시장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세계 각국은
G20, FSB 등의 논의를 토대로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 대형금융회사 정리제도 도입
등 금융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형 금융회사들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D-SIB¹⁾)로 지정하고,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도입하는 등
위기대응을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공직생활의 많은 부분을
위기 극복의 '현장(現場)'에서 함께 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G20 정상회의 등을 통해
금융시장의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새로운 '금융질서'를 만드는 데 일조했다는 점에서

시스템 리스크 대응체계를 논의하는
오늘 자리가 더욱 의미 깊게 다가옵니다.

아울러, 2011년 저축은행 사태는
통합예금보험제도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통합예금보험제도가 있었기에
1997년 외환위기 당시처럼
공적자금을 조성하지 않고,
금융권이 자체적으로 조성한 기금을 통해
저축은행권의 부실을 정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 D-SIB: 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

3. 우리경제의 새로운 도전과제

그동안 우리 경제가 보여준
위기 극복의 성공 경험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경제는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성장’과 ‘분배’의 고리가 약화되면서
성장을 통해 파이(pie)를 키우면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성공 공식’이
더 이상 통용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경제성장이 궁극적으로는 불평등 해소에 기여한다는
‘쿠즈네츠 가설’(Kuznets Hypothesis)²⁾이
더 이상 맞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경제학자들과 정책담당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경제성장과 분배, 기술진보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고민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술과 소득분배,
기술과 일자리 문제에 대해
비교적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4차산업 혁명으로 대변되는
최근의 기술혁신이 예상외로 빠르게 느껴집니다.

2) Simon Kuznets(197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가 제안했던 가설로 경제성장 초기 단계에는 경제성장에 따라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나, 경제가 일정단계 이상 성장하는 경우에는 경제성장에 따라 소득 불평등이 감소한다는 주장

기술 진보가
제조업 등 중간계층의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직업’과 ‘소득’의 양극화(polarization)를 심화시키고 있는
그 거대한 변화의 움직임(Autor and Dorn, 2013)³⁾이
비단 미국 등에만 국한되는 현상은 아닐 것입니다.

‘세계화’(globalization)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방’과 ‘도전’을 통한 세계화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전체의 소득도 증대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실(果實)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가는 것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글로벌 경쟁력에서 뒤처진 산업과
저숙련 근로자들은 ‘구조조정’과 ‘실업’이라는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불평등(inequality) 문제는
이제 ‘소득’과 ‘임금’의 분배 문제를 넘어,
‘교육’과 ‘기회’의 불평등, ‘건강’과 ‘수명’의 불평등,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의 불평등 문제로
심화되는 것이 세계적 추세입니다.

우리 경제가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3) David H. Autor and David Dorn, The growth of low-skill services jobs and the polarization of the US labor market, American Economic Review 2013

단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처해 있는
경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주목해야 할 위험요인입니다.

저금리, 풍부한 유동성 등
위기극복과정에서 도입된 예외적 조치들이
정상화(normalization)되는 과정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유동성의 '안전자산 회귀'가 가속화되면서,
남미 등 신흥국의 금융시장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글로벌 실물경제여건 또한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미국 경제의 '나홀로' 호황(divergence)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그 누구도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중국 경제의 '부채 의존형' 구조와 '금융 부실'은
지속 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protectionism)와
미·중간 무역 분쟁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큰 부담요인입니다.

4. 향후 정책방향

내외 귀빈 여러분!

정부는 이와 같은 단기적 경제·금융시장 불안과
중장기 구조적 변화라는 ‘이중(二重)’의 도전에
철저히 대응하고자 합니다.

단기적으로 가계부채 등
우리 금융시장의 취약한 고리를 중심으로
리스크 관리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첫째,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GDP대비 가계부채⁴⁾의 규모가 다소 큰 편이나,
고소득 가구의 비중⁵⁾ 등 질적 구조를 감안할 때,
시스템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됩니다.

DSR 관리기준의 적용 확대 등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낮춰 나가는 한편,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높여 나가는 등
질적(質的) 구조개선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4) GDP대비 가계부채: 한국 95.4% (OECD 35개국 중 6위)

5) 전체 가계부채 중 고소득(4~5분위) 가구의 가계부채 비중이 약 69.6%를 차지

둘째, 비은행권에 대한

거시건전성(macro-prudential)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비은행 금융중개(Non-banking Financial Intermediation)란
헤지펀드 등과 같이 전통적인 은행범주 밖에서의
신용중개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느슨한 규제가 적용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비은행권의 거시건전성 관리 부재가
잠재적 시스템 리스크로 누적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위기 가능성에 대비하여
'금융시장 안전망'도 촘촘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통합예금자보호제도의 장점을 충분히 살려,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 안정 유지'라는
본연(本然)의 기능에 집중해야 합니다.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인지하고,
금융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한편,
위기에 대비하여, 예금자보호 기능과
금융구조조정 역량을 제고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금융시장안정을 위한 제도들을
꼼꼼히 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대형금융회사의 부실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질서 있는(orderly) 정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D-SIB)에 대한
회생·정리계획(RRP)⁶⁾을 도입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금융이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기업구조조정 등을 통해
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자금이 물 흐르듯이
흘러갈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이 ‘기술 진보’에 발맞춰
양질의 일자리(decent job)를 창출하는데 앞장서는 한편,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제고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금융의 ‘포용성’(inclusiveness)을 강화하여,
양극화(polarization) 문제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6) RRP: Recovery & Resolution Plan

5. 맺음 말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는
위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해야 합니다.

前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 앤드류 크로켓⁷⁾은
‘경기침체에 위험이 증가하고,
호황기에 감소한다는 통념은 잘못된 것’이라며,

‘금융시스템의 위험(risk)과 불균형(imbalance)은
호황기에 축적되어 불황기에 그 모습을 드러낼 뿐’
이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위기대응능력(resilience)을
제고하는 데도 앞장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정책심포지엄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지혜가 모여,
우리 금융시장의 위기대응능력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좋은 의견들이 제안되기를 희망합니다.

정부도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Andrew Crockett(1943-2012). BIS 사무총장을 10년간 재직(1994-2003)했으며,
금융안정위원회(FSB)의 전신인 금융안정포럼(FSF) 초대의장 역임(1999-2003)